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4.5일제·공공의료 확충"

"기본적 삶 보장 공동체 책임" 농어촌 기본소득·햇빛 연금 지역화폐·교통약자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기본사회' 구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실행할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제는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공약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2월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 위원회는 대표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으며, 부위원장만 27명에 달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소개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교육 공약으로는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교육 강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주도 초등돌봄 체계 구축,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청년·국민 패스 도입, 교통약자 전용 교통수단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소한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더욱 넓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로 고민·걱정 '뚝'

전남도·광주지방기상청 협업 기상 안전지수·여행지 등 추천

광주지방기상청이 전남 섬을 찾는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섬 여행 날씨'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섬 여행 날씨' 서비스는 전남 주요 섬의 날씨 정보와 해양관광 기상안전지수, 나에게 맞는 섬 여행지 추천 등 기능을 제공한다.

앞서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해부터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해 섬 검색 기능 도입, 누리소통망(SNS) 공유 기능 추가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날씨 서비스 제공 섬은 전남도가 선정한 24곳의 '가고 싶은 섬'과 여수 거문도, 영광 송이도, 완도 청산도, 신안 가거도·흑산(홍)도 등 유명 관광 섬 5곳, 여수 개도·금오도·대경도·백야도·화태도 등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방문객이 둘러보기 좋을 만한 인근 섬 5곳 등 총 34개 섬이다.

또 기상안전지수를 통해 여행객은 방문하려는 섬의 날씨 정보와 함께 해당 섬에서 체험할 다양한 활동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안전지수는 총 6가지로, 둘레길 등 섬 관광 활동에 대한 섬여행지수, 뱃멀미 가능성을 등급화한 승선체감지수, 해양레저 및 생태체험의 안전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다수영·갯바위낚시·갯벌체험·세일링 지수다.

전남 섬에 대해 잘 모르는 여행객이라면 '섬 여행지 추천' 기능을 통해 나에게 맞는 섬을 알아볼 수도 있다. 여행하려는 시기와 좋아하는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날씨와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해 적합한 섬 4곳을 추천해 준다.

추천 결과는 카카오톡,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인과 공유할 수 있다.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는 인터넷 검색 또는 전남 가고 싶은 섬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지사, 고흥 이노스페이스 시험장 준공식 참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고흥 포두면에서 열린 '이노스페이스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에서 주요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회의원 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다. 연합뉴스

박수현 의원 "지역 언론, 민주주의 핵심 기반"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발의 안정적 기금 출연 등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 보존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 발전 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역신문 발전 기금과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는 실무 집행조직인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원에 달했던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 현재는 80억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지적다.

이어 "지역 언론은 여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그 토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 활동중인 박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지역 언론사를 직접 개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신문 기자들과 1대 1 소통을 통해 지역 언론의 현실과 요구를 긴밀히 파악해 왔다.

서울=김현수 기자